

제358회 국회 (임시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3월15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
 - 청년 일자리 정책
 - 청년의 정책 및 정치참여 확대

상정된 안건

1.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 1
 - 청년 일자리 정책
 - 청년의 정책 및 정치참여 확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6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을 재촉하고 가뭄을 우리가 이기는 데 좋은 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님들과 청년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차 전체회의에서 청년미래특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 선정은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위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모두 열세 분의 자문위원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열세 분의 명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열세 분의 자문위원 중에 여섯 분의 자문위원을 먼저 모시고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청년들이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의 정치참여 문제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의 장상운 사회복지정책관, 고용노동부의 김부희 청년고용기획과장, 여성가족부의 윤남이 여성인력개발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

- 청년 일자리 정책
- 청년의 정책 및 정치참여 확대

(10시16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맨 우측의 김혜빈 싱크탱크 미래이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참여연대 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정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형 공주대 교수님이십니다.

(자문위원 인사)

그러면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토론회는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의 정책 및 정치참여 확대를 주제로 해서 여섯 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 간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 내외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혜빈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은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김혜빈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점과 참여 전략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은 누구인가?

청년 정치를 논하기 이전에 청년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를 만들어 낼 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떠다니며,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본질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만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논리에 따르면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도 가장 높게 잡은 나이가 만 39세이며, 43개국 이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전 세계 사회 보편적으로 2030세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청년의 정의는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띠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당연시되어야 할 연령대여야 합니다. 가끔 본인이 청년의 연령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청년이다 혹은 인간의 생애주기의 확장으로 40대도 청년이다라는 웃지 못할 난센스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표성과 정당성입니다.

청년이 청년세대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청년 정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세대와는 다릅니다. 다시 청년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청년문제 해결을 맡는다면 결국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2. 청년 정치의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십 돌풍이 불며 우리나라에도 청년 정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경력이 적어서 청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쉽게 휩쓸릴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 정치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우월주의이고 하나는 빗지는 청년 정치입니다.

청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청년우월주의식 사고는 청년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뒤에 자료를 보면 2030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밑에 원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청년 비중은 1% 정도이고, 지방선거 당선 2030 청년 비율도 3% 정도에 그칩니다.

3.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취업조차 안되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할 여력이 없어서 무관심합니다. 또 투표를 해도 세상은 바

꾸지 않는다는 인식과 직접 정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뒤에 나와 있듯이 기탁금 납부제를 보면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4.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청년세대는 정치권의 유리천장, 성별·인종·연령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이 높고 단단합니다. 이런 암묵적인 유리천장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뚫고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청년들이 정치하기에는 어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밑의 직급이기 때문에윗사람의 의사에 복종하기에 마음대로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강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청년들은 정치참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면 참여의 폭이 넓게 됩니다.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만 18세로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청년 할당입니다.

기성세대에 비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비례대표 할당을 해야 합니다. 30%를 하게 되면 청년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이러한 풍토에서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청년 할당 30%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또 각종 선거기탁금 인하를 요청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각종 선거기탁금입니다. 청년들에 한해서는 기탁금을 절대적으로 낮추어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 정치의 문호가 넓어지고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어야만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대폭 증가될 것이며, 정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혜빈 이사님, 제한된 시간에 좋은 내용 발표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청년 정치의 참여 전략, 청년 자강, 청년 부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또 기존 정치권에 쓴소리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도 더 많이 앞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수고하

셨고요.

다음 김효선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김효선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공천 할당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앞서서 청년이 가진 문제, 청년 이슈 등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청년의 정치참여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얽혀 있기 때문에 주거, 복지, 고용, 부채, 문화 등에 대해서 다방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하지만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고 청년문제에 접근하고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청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청년이 대기업만 찾기 때문에, 청년이 도전정신이 좀 부족해서, 청년이 능력이 부족해서, 청년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결과 여전히 청년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3포세대를 넘어서 지금은 N포세대까지 칭하게 되었고 부모세대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한 캥거루족, 일할 의지가 없다는 니트족이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청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업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이 무능한 취약계층이자 사회의 문제로만 회자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도 디지털세대이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더불어 정보수집이 빠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독창성과 개성, 다양성을 가지고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력도 겸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현재 청년들은 부모세대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문제로만 거론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모든 선택을 결정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거나 도와줄 수 없듯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산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와 정책이 뗄 수 없다는 점,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정책을 위해서 청년의 정치참여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도 이런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김해영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고, 노웅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서는 ‘정당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창일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서는 청년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김해영 의원님의 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시에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10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서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기조는 청년정책 결정에 있어서 청년의 당사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이슈는 여성 이슈와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정치의 장에서 행위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가 성평등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주장에 여성계에서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대칭적인 남성 중심의 정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에서 여성할당제가 받아들여져서 17대 국회에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성할당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서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할당제는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여성의 이익이 많이 대표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는 데 그 목적이 있

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적은 여성 정치참여 목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정치의 장에서 행위자로 활동하기 어려운 과소대표에 기회를 제공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로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친여성적 입법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 권리 관련, 가족 및 양육 관련,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확실히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서 여성 의원의 수적 확대가 여성 이익의 대표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기반이 없는 외부 전문직에서 충원되어서 정당 내에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전략이라는 이른바 끼워 넣기 전략으로 여성들이 활용되어서 정당 내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의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성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들이 일찍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국회의원 충원 과정이기 때문에 정당의 일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 소속의 여성 의원과 초당적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치적 소외계층의 두 주체인 여성과 청년의 문제 개선 방안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천할당제가 세대 간 기회의 평등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미래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S 대통령의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론과 DJ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은 당시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았던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정치권에서 수세에 몰리면 내놓는 수많은 전략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피 수혈의 본질은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른바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의 일체감이 높으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는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외부에서만 전문가를 섭외해 오는 것은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요구에 맞는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정당이 지녀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젊은 피 수혈론은 정당이 인재가 없다는 반증이고 정당이 미래 세대의 정치인 양성이란 과제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은 청년 정치인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치참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짓지 않고 정당도 표기하여 정치의 장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와 정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청년의 기준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청년위원회의 나이 기준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청년 기준이만 45세 미만이고 정의당은 만 35세, 바른미래당은 만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처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을 비례대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공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세대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기 어려움을 고려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그리고 정당에 납부하는 후보자 등록비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출마 시에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둘 수 있고 청년들에 한해 기탁금과 후보자 등록비를 일부 할인하는 등의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들은 30대만 되어도 노장투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치의 장에서는 50

세에서는 청년이고 60세에서는 중년, 70세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치의 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20대, 30대부터 정치를 접해 정치가로서 성장해서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참여를 할 수 있어야 당사자의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세대가 어렵고 복잡한 사회에서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는 희망이 없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대보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글로벌 마인드, 치열한 스펙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생각해 본다면 청년은 무능한 세대가 아닙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호선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신보라 위원님이나 김해영 위원님 같은 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엽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지금 시간을 7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좋은 말씀 하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문위원 **안주엽**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그냥 보시면 기본적인 것은 이해되실 거니까 그 긴 것을 짧은 시간에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18년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고요. 청년층 실업률은 9.8%, 통상 얘기하듯이 청년의 체감 실업률 그것은 한 2배 반 정도 되어 갖고 22~24%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제 발표된 자료 중에 가장 쇼킹했던 부분들은 고용증가율이 10만여 명밖에 안 됐다, 이것은 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하고 있고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최저임금 부분만 빼놓고 다른 이유 쪽에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런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대통령 각하가 큰 보고를 하나 받지요, 청년고용 대책. 앞에다가 ‘특단’이라는 말을 언론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5개 부처가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 저는 아직까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뒤에 간단히 얘기드릴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청년층 고용시장의 고용률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죽 떨어져요, 물론 사이클은 있지만. 마지막의 것은 2015년까지의 자료를 갖고 제가 그냥 추측을 했습니다, 저렇게 갈 거다. 그랬는데 2017년에 42.2%까지 갔습니다. 약간 더 높아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이게 5세 연령별로 구분한 겁니다. 뭐냐 하면 15세~19세 생각해 보세요, 애들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고등학생들에 일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용률은 전부 다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여하한 정책을 써도 방법이 없다. 방법 하나는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시키자 이것은 가능하지만 안 된다는 거지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4세는 저게 대학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군대 안 간 여성들은 마지막에 졸업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죽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대학을 많이 갔다, 지난 이삼십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 가서 알바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사이클이지만 최근에 좀 높아지는 경향이지요.

그래서 저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생들을 전부 다 알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25세~29세를 보면 여기는 고용률이 늘었습니다. 저 나이가 대학을 마치고 나오는 나이거든요.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늘었던 게…… 사실은 남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컸었는데, 이게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은 역전됐어요, 여성이 더 높아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한 10여 년 동안 저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는 거지요. 저때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청년들이라고 봤을 때 저게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청년정책의 타겟은 25세~29세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완화도 아닙니다. 해소하겠다고는 꿈을 갖고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해서 죽 나온 것입니다.

그럼 보면 일단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요. ‘12년 동안에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기회’라는 말을 써서 조금 약간 리조트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정책들을 나열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쪽 써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시장하고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지난 1999년, 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이잖아요. 갖가지 세계고금에 있던 모든 정책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안 좋다.

또 어떤 사람들 일부는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니까 청년층 고용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청년들이 좋은 데 가려고 학벌을 자꾸 쌓지요. 거기다 요즘은 스펙까지 쌓고 이러니까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일찍 은퇴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애가 짧아요. 생애가 짧으니까 좋은 데 가서 오랫동안 일하려고 합니다, 장시간 근로하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불리하고 경력단절 생기고 그다음에 임금체계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는 경직된 노사관계하고 대기업 노조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의 격차…… 그래서 흔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하청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양극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지요. 이런 것

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중구조가 고학력화를 더 촉진하고, 이게 20년간의 악순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어디부터 할 것인지. 원·하청이나 격차를 없애자고 말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 기간과 국민 전체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것만 바라볼 수는 없고 저런 혁신적인 것을 하면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일단 냈는데 첫 일자리 투자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3년 동안 일자리를 잡게 유인하는 정책으로 하자. 그래서 빨리 일자리를 잡을수록 혜택이 많이 가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삼 년 전에 국회에도 한번 와서 발표를 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모든 청년들한테 생애 한 번씩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불평등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기업에 잘 간 친구들은 오케이, 그것으로 됐고 못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셈이 되니까요. 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난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쪽으로 제가 모색한 것 중에 하나가 첫 일자리 투자법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작년에 왈가왈부 좀 됐고 묘하게 흘러가다가 사라졌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좀 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의 대안으로서의 모병제를 실시하자.

현재 병역의무가 21개월이고 현 정부에서는 18개월까지 단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병제를 실시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병역자원이 모자라지고 있는데 복무기간까지 줄이면 더 모자라진다, 그런데 그것을 병력 고도화라는 것으로 하는 데에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3년 이상, 본인이 원하면 5년 이상으로 해서 모병제를 하는데 괜찮은 일자리 대안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가야 된다. 먹을 것 주고 재워 주고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군사훈련 외에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시켜 자격증을 따게 하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로서의 군 생활일 수도 있다.

하여튼 몇 년을 하든 간에 3년 이상 했을 때

마지막 1년간은 전직 지원…… 지금 국방부의 전직 지원 시스템은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지원을 좀 더 집중해서 민간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 너무 한꺼번에 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는 한 1만 명부터 시범해서 해 보고 해마다 쪽 늘려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에 10만 명 정도 하면…… 10만이라는 숫자가 특이하게 좋은 숫자인데 하여튼 10만 명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병제에서는 여성도 동일한 기회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일자리 대안이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저도 좀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입니다. 현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측면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인력을 상당 수준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이것은 OECD 자료를 봐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공시족이 많이 되어 가지고 노랑진에 많이 있다라는 측면이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데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것을 넣는 것이 어떨까, 위헌 소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 기간을 일하고……

여기 공무원들도 와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현장성이 없다, 그렇지요? 가장 나쁘게 표현했을 때 ‘탁상 위에서 그림 그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자격요건조차 문제가 되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위헌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도입도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생각해서 최초 도입 시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에서 정책 인력을 중심으로 일단 적용을 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안주엽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히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제일 당면하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가 바로 청년 일자리인데, 지금 말씀 들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 말씀인데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과연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지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안혜영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안혜영** 저는 제출한 자료는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시·구의원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각종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부터 주거 문제는 물론 인구절벽과 고령화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단 한 가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나머지 17개 광역 도시는 물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정당과 정치인들의 갈등을 야기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늦었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고심하고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볼 때 나이에 대한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고용·실업 문제에 국한되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핵가족화나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청년의 독립으로 인해 청년 1인가구가 증가했고 청년실업이 가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년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청년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현재 청년정책의 주요 문제가 지

나치게 청년 고용과 실업에만 정책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나이 기준 설정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 창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청년 나이가 15~34세 그리고 경기도의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18~34세…… 나이에 맞춰서 청년정책의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중구난방의 상황이라서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만들고 다루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나아가 청년들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아주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식생활 문제, 또한 기업이나 단체들의 강한 목소리는 반영되는 반면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비추어 볼 때…… 물론 정책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마다 또 연령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청년의 공공분야 활동의 경력인정제 같은 경우 청년 지원 정책을 할 경우에 고용 유지를 위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을 위한 활동이나 청년들의 창직·창업 활동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이나 관련 분야 진출 시에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활동증명사업들을 위한 경력인정제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청년 활동과 경력인정제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포인트를 활용해서 공기업과 중간지원센터 등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청년활동가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직 인턴제 방식으로 기업과 청년 구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사업, 현장에서의 청년 활동과 등록을 통해서 사전교육이나 활동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4~39세 사이의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금융 구제 활동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청년 취업 정책이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사업, 일자리 통장,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 34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대에 취업을 하지 못한 중장년에 접어드는 예비 청년들에게는 아주 더 악순환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가계 부채에 의한 부채 탕감이나 신용회복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나 보건의 문제 이러한 나머지 다른 문제에 대한 조례나 법체계에 대한 지원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응에안성의 호치민 공산청년연맹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청년들 대부분의, 한 68% 이상이 이 당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연맹으로 되어 있어서 1931년도부터 현재 당원들의 거의 68%가 청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청년들이 예산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거버넌스의 역할이 충분히 중앙과 국회, 의원 또 정치인들 그리고 집행부 간에 상호 협조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정치참여나 아니면 정치·사회단체, 청소년·대학생 사회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시행하는 데에, 또 국제적인 교류 활동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그런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기구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청년들의 문제는 저출산과 그리고 앞두고 있는 통일 기반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안혜영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좋은 말씀 감사한데 내용 중에 청년정책 전달기구……

총리실의 장상윤 정책관님, 이거 지금 어디까

지 진행됐지요? 전달기구 설치하는 문제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진행이……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아직 확정 안 됐고 논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고, 여러 분이 지적하고 여러 군데서 지적하는 것인데 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기구는 기구고 기구가 생기기 전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에 관해서 논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이윤정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두 달 연속해서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청년실업자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진 청년들이 2월 말 예정인 공무원시험과 함께 다시 실업자로 편입되는 3월에는 청년실업률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보여 주기식의 재탕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정부 주도로 진행된 정책들은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파이만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1호 업무 지시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초기 많은 기대에 힘입어 고용정책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장기비전 제시 등은커녕 한 달에 한 번 회의로 어젠다 발굴조차 이끌지 못하고 국정과제를 재확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분과는 12월 마지막 회의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점, 일자리위원회 위원 구성도 정부 관료들이 대부분인 점도 많이 아쉽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선행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고용여건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완충될 수 있는 대안재와 함께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도 매우 불편합니다. 차라리 다른 목적에 의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습이 어찌면 더 솔직할 것입니다.

결국 청년 관련 예산은 일부분일 텐데 골든타임이라는 등 급박하다는 등 여러 명분과 함께 다른 예산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정책 관련 예산들은 홍보 미비의 이유로 오히려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부터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지원하겠다는 청년채용공제가 그 실례입니다. 정부 출범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도출되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오랜 기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후 현재 아직도 구직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최저시급이 급격히 올라 오히려 일할 곳이 눈에 띄게 줄어 알바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소상공인 몇 대표님들은 온 가족이 매달리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 버린 최저시급으로 인해 일해 주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적게 버는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가 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의 지인들이 정부의 여러 결정에 의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신중한 정책결정과 완충될 수 있는 대안재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수직 하향식 정책 기조에서 탈피하여 정책 효과와 체감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 강구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총체적 사회문제임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와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정보 제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중심이 되어 줄 수 있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기초의회,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다양한 사업들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또 이에 맞추어 조례들이 일부 개정되어야 할 텐데 이 또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청년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청년예산이 쏟아져 나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조차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참 속상합니다.

이는 법령이라는 준거가 없는 상태를 말해 주며 총괄전담조직의 부재, 행정전담조직의 부재,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재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청년기본법 제정의 경우는 시급성을 공감해 주셔서 빠르고 합리적인 논의 후 명확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정보 제공은 풀어 말하자면 결국 정책을 널리 알려져 많은 수혜자들이 만족도 높게 정책적용을 받게 하자입니다.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도 홍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린다든지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팸플릿을 만들어 관련기관에 배치하는 경우가 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보접근이 용이하여야 하고 신청 과정이 좀 더 간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정되어 있는 예산조차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정책 마케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대통령 피선거권 30세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내에 청년위원 참여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39세 프랑크 마크롱 대통령, 31세의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등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만 40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젊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선에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30세로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 위원의 주류 세대는 일부 삼사십대와 대부분 오륙십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에서 청년의 인구 비율을 고민해

주셔서 세대별 목소리가 위원회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대의 가치관과 세대환경, 30대의 가치관과 세대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위원 참여를 명시화하는 것도 시급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면관계상 이렇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발제하였지만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의 정책입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과 같은 기능 중심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문제는 현재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단순 몇 가지 키워드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대상 중심 정책은 모든 영역에 집약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윤정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상 중심 정책이라 오늘 아마 두 가지 주제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자리하고 정치참여,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형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이주형 혁신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자리미래특위를 만든 것을 국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한 자문위원님들의 발표를 보니까 다 같이 청년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깊이 연구한 것이 돋보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청년과 장년을 함께 가르치는 교수로서 청년 일자리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이나 각 부처에서 나오는 정책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또는 현장에서 봤을 때 모두가 패이퍼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바뀔 때마다 또는 정부가 담당이 바뀔 때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기의 치부만, 실적만 올리게 되다 보니까 마치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어장에 고기는 없고 물만 가득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추정 현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미래 행복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처별 유사 정책의 문제점이 각 부처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제출한 각 부처의 자료를 보니까 산자부나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자료가 나와 있는 수치만 발표했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것을 과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 현장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먼저 청년이라는 말은 무수히 나오지만 과연 이 청년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제가 여성가족부 사례를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부라고 있었는데 각 부처마다 청년 얘기가 나오지만 청년 부처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에 있는 청소년 담당 부서를 국무총리 산하로 가칭 청장년미래부를 창설해서 청년복지정책부터 미래혁신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 청장년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여기 위원님 와 계시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장년문제는 그렇게 깊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이 행복한 나라, 창업국가를 조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면밀히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학 학생들을 매칭하여 취업 목적의 산학실습프로젝트는 무지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을 조련할 수 있는 조련사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표현한 조련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조련사가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또는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나 위원님들이 과연 조련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백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년기술창업과 은퇴자의 경력을 합한다면 어떨까요?

기술혁신을 이루는 창업 분위기 조성해서 베이비부머 세대…… 다 알고 있는 통계입니다. 통상 1953년~1963년 세대라고 그러는데 2015년부터 은퇴가 시작되어 가지고 2020년이면 7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부머 세대는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어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4차 산업의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평균 90세까지 산답니다.

은퇴자들을 활용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퇴자들은 대한민국을 선두 국가 또는 선두 기술로 이끈 산업역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58세~65세를 장년이라고 부르지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지방에 봉사활동을 갔더니 청년회장 연세가 68세더라고요. 그렇다면 장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우리 청년들이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화가, 멘토·멘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윈윈전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창업자는 실패의 위기를 겪을 시간도 없이 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과연 이들을 누가 손잡아 줄까요, 누가 리드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은퇴자들이 바로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청년이 내는 겁니다. 기술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은퇴자의 경험과 경력으로 구성한다면 실패의 확률이 적을 겁니다. 혁신성,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청장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청년은 실력을 원합니다. 실력이 많습니다. 은퇴자는 학력도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다 연세가 들다 보면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은퇴자의 역할입니다. 오직 기술과 경험, 경험으로 협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은퇴자의 그런 기술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전수한다면 이것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공으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데요, 발명이나 특허는 학력이나 지연이 필요 없는 유일한 취업 수단입니다. 발명특허가 있을 경우에 취업할 확률, 특허가 있을 경우에 창업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지식재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가치를 분석 평가하고 평가된 기술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기술금융 125조가 기업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과연 125조를 아무 기술도 없는 기업에 썼을 경우에 그 미미한 효과를 누가 다 책임질지 저는 걱

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많이 해 줘야 성과가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만큼 도덕적인 기업가정신의 문제로 과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장년을 합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면 공유경제의 혁신을 창조, 청년실업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나 대학, 고등학교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 청년취업수당까지 지급을 합니다. 장려금을 주는 정책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발명을 유도한다면 이게 사업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를 먹는 방법부터 청년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 장년세대에서 함께 가르쳐 준다면, 이 작은 아이디어를 잘 가공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탄생해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청장년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자 한 친구가 노량진에서 공무원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23살 먹은 학생인데 공무원학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강원도 친구인데, 공무원을 자기가 합격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마침 시골에 갔더니 전통 장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팔지 못해서 다 상하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이 지리적 재산,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 또는 산자부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지리적 재산 표시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앙대학교 학생 하나가 외국에 가서 우유를 가지고 DIY 어린이 가구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장년 은퇴자한테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이만큼 청년 창업가와 장년 은퇴자가 협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창업자금 조달 지원이 현재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청장년창업자금으로 바꾼다면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제도전 기업인과 청년 창업자 협업으로 재창업할 때 주는 돈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장년을 묶었을 때 좀 더 혜택을 준다면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계약학과 문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 개선되는 방법이, 현재는 근로자에 한해서 직장을 3년 이상을 다녀야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청년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을 1년 이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또 계약학과 입학조건에 보면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근로자를 가능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들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대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창업교육이 나라에 정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립대 교수를 중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1~2년 전에 생애설계를 가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연구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1~2년을 놀게 할 게 아니라, 국립대 교수에 한해서 시작하면 되겠지요, 전공별로 창업을 원하는 청장년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제반 정책을 지원한다면 청장년 창업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주형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문제, 청년과 은퇴자의 협업에 의한 기술창업 촉진 문제,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상 발제자 발표를 마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우선 첫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발제자나 관계자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경기 광주의 임종성 위원입니다.

김혜빈 싱크탱크 미래이사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제기해 주신 제언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히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해 가지고 그 기탁금을 낼 수 있느냐,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눈길이 와닿는 게 청년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아까 늘리자고 하셨잖아요?

○자문위원 김혜빈 예.

○임종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지금 지방선거기획단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여성들은 여성을 50% 해 달라 또 청년은 30% 해 달라, 보통 20~30%, 노인 20%, 장애인 20%, 노동 20% 해 달라고 많이들 해요. 한 150% 돼요. 여기에다가 전문가 직종 하면 한 20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자문위원님께서 이 30%에 대한 기준점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김혜빈 이 기준은 저희가 처음에 2030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된 수치예요. 이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여성이면서 청년이잖아요?

○자문위원 김혜빈 예.

○임종성 위원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주로 해 달라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을 해 달라 그러는데 과연 청년 비율과 여성 비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문위원 김혜빈 사실 여성 관련해서도……

○임종성 위원 뒤에 청년도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것이 사실은 여성분들은 여성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여성들 비율을 높이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은 청년이 조금이라도 기성세대에 합류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점을 청년들이 여성하고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강을 갔다가 그

중에 여성이면서 청년인 분을 스카우트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줘 보자 해서. 이분이 과연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테스트해 보고 그러려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키려고 영입 케이스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각종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혜빈 자문위원님께서 혹시 청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 한번, 정치참여를 왜 해야 된다……

○자문위원 김혜빈 짧게 말씀드려야 돼요?

○임종성 위원 길게 하셔도 돼요.

○자문위원 김혜빈 사실 많은 자문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짧게 했지만 여태껏 여기서 활동했을 때 보면 청년의 목소리를 아시는 분이 아예 없어요. 대화를 하면 나중에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얘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아예 알 수가 없었다고.

이것을 알려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청년들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이렇게 청년 할당으로 해서 나오든가 해야지 그나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이윤정 자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발제문을 얘기하시면서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다’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이윤정 예.

○임종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현황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1만 명 중에서 직접고용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범죄자나 부적격자 이것을 거르기 위해서 최소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현재 11개 용역사 중에 1004명은 전부 완료됐거든요. 나머지 용역사들도 순차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고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떠돌거나 일반

지라시 보고 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위원 이윤정 잠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종성 위원 예.

○자문위원 이윤정 질의응답이니까 저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문위원 이윤정 그런 자료를 만약에 제가 볼 수 있었다면 좀 더 면밀한 발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의 경우는 저의 실 사례, 저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용역 하는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6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한 정책 발표 이후에 사장님께서 이 친구를 포함한 3명을 정리해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게 현재 사실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데이터베이스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또 데이터로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사례들도 있다는 맹점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만 서른이거든요. 이러한 친구들이 20대 초반에 직장을 구해서 6~7년간 다니다가 다시 재고용에 나가게 되면 사실상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니고 서른 넘은 경력직을 받는 그런 중소기업을 정말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완충작용도 좀 겹겹히 받아 주셔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종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분만……

제가 원래 이윤정 자문위원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주형 교수님께 하나 제안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페이퍼적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좋은 제안들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정확한 팩트 없이 그냥 두루뭇술하게 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각종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제안들을 해서 법을 제·개정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마음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어떠세요?

○자문위원 이주형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위원님들과 상대하

고 있지만 방송으로나 보던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낸 것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꼭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교수님들도 활용 좀 해라 또는 은퇴자도 활용해라, 청년들이 행복한 또 혁신을 실제 각 부처나 의원님들이 서류상으로는 잘 만들지만 현장의 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성 위원**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의 공약 중에 하나가 썰쳐 브리지를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폐공장들 그것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창의성 있게끔 공연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서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이것을 제기하고 던졌을 때 답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기존 세대가 모든 것을 장악해 가지고 하면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맡겼을 때 제대로 된 청년정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토론회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자문위원 이주형**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임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섭 위원** 청년들 요새 영혼을 팔아서 일 자리를 하고 싶다는데 팔 영혼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 정치참여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윤정 위원장한테 질문한 것 중에 아까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천공항공사에 용역 인력을 파견하고 지원하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백 개예요. 수백 개인데 용역 인력들은 공항공사에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서 그대로 있는데 용역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윤정 위원장이 목격한 것은 아마 자기 친구가 용역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회사의 일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인천공항공사에 인력 공급하던 것이 다 줄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회사의 일반 직원들이 줄었다, 그것을 임종성 위원님은 용역 직원은 안 줄었다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윤정 위원장은 그 시설관리회사의 일반 직원이 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이윤정 위원장하고 김혜빈 이사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 현대사회에 보면 변혁기에 대한민국 역사에 변혁을 이룬 것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예요. 직접적으로 4·19라든지 6·10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주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정치인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치에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안 기울었는데, 저희가 선거 때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시점에 대학생들을 당원으로 하려고 하면 거의 관심을 안 기울어요. 그리고 선거 때는 ‘우리 청년들은 왜 일정 비율, 일정 할당을 안 해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당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주면 그만큼 대학생들한테도 또 청년들한테도 할당이 가고 선거 때 많은 기회가 갈 텐데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다가 선거 때만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면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이 없거든요. 평상시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문위원 김혜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

핵 이후에는 다른 정당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각 당에 예비원서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당에서도 청년정치학교를 만들어서 굳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많아서 청년정치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안에서도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별로 안 됐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는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던 구심된 청년들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당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뒤에 세우는 병풍 식으로나 아니면 계속 지치게 이용하는 식이 사실 많았거든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할당제나 이런 게 딱 되어 있으면 청년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디에서는 오라고 하고 계속 참여는 하는데 발언 기회는 없으니까 제가 지켜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왔던 친구들도 다 버티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학교나 아니면 취업하려고 하면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정당에 가입하면 안 좋게 하겠다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때문에 청년들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용만 당하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실 계속 아, 아, 아 이러다가 그냥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할당제로서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명문화되어 있어야지 청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위원 이윤정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위원 이윤정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치학교나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각 정당 내에 부재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뿐만 아니라 5개 정당 대학생위원회가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2030세대들의 갈증은 정당에서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싶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소양이라든가 정강·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의 공간의 벽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벽을 느끼고 한 번 무너진 친구들

은 사실 다시 한번 도전하기에는 2배, 3배, 10배 이상의 도전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친구들을 각각의 정당들이 당의 기치나 방향성을 공감하고 그러한 것을 내포하는 의정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대학생부터……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 꼭 대학 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청년들이 단계 단계 밟아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권 내의 문화, 인큐베이팅 문화가 좀 체계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어야지 2030 청년들도 탄탄히 성장되고 기회가 됐을 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입성해서 2030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안주엽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주형 교수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좀 상반된 얘기를 하셨어요. 안주엽 위원님은 괜찮은 일자리 대안으로 첫 일자리 지원 대책을 하거나 모병제를 하거나 공무원시험제도 개편 이런 지원을 해서 민간이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에 방점을 두셨고, 이주형 교수님은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돈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은행의 융자 받아서 그것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결코 단기적인 거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위원님은 모병제, 공무원시험제도 이런 얘기만 하셔서 시각이 좀 다르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안주엽 약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쓰는 헛돈을 제대로 쓰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킵(keep)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왜곡된 방향으로 가

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중소기업 안 갑니까? 이유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정적이지도 않고 현재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리고 미래도 없고, 그렇지요?

처음에 대학 졸업하는 애들 88%가 첫 일자리 잡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잡아요, 평균. 그런데 그중에 60% 이상이 24개월 이내에 그만둡니다. 나쁜 일자리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의 친구들도 4명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없어진다고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자라는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을 잘못시킨 부분도 있고, 우리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은 환경은 만들어 주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왜곡을 좀 정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안 가니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한 3년 숙련되게 일을 해 보고 ‘이것도 괜찮다’ 하면 거기 더 있는 거고 ‘그래도 나는 역시 대기업 가고 싶다’ 하면 그때는 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문 앞에라도 가 보게 만들자, 그렇지요?

노량진에 가서 3년, 5년 썩는 것보다는 거기라도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실제 그게 맞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근본적인 원인이라 했는데 원·하청 문제, 그렇지요?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원·하청 문제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노동법이나 모든 제도하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좋게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척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의 근로자들은 아무 혜택이 안 가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뜯어고쳐서 제대로 된 정상화, 진짜 정상화한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초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그리고 거기 는 시장주의를 우리보다 더 주장하고 모든 사람

들이 마켓 오리엔트(market orient)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우리는 뭐 특이한 나라라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 차이가 엄청나면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쌓여 있는 왜곡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자유방임식으로, 아니면 시장주의식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 왜곡에 따라서 나오는 로스(loss)들을 줄여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상당히 페어(fair)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한테 페어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 얘기하시는데, 세금은 가장 불요불급한 데부터 써야 된다. 그런 것을 쭉 봤을 때 청년의 경우는 거기에 쓰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지원법’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투자법’이라는 거지요. 청년들한테 주는 3년간의 돈은 지원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투자’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정유섭 위원 일본 얘기하셨어요. 일본이 5년 전만 해도 청년실업이 우리보다 더 높았거든요.

○자문위원 안주엽 예, 그렇지요.

○정유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 절반이거든요.

○자문위원 안주엽 예, 왜 그러겠습니까?

○정유섭 위원 왜 그런 차이가 왔나? 그게 저는 궁금하던데.

○자문위원 안주엽 기본적으로는 기업 마인드부터 바뀌 볼게요.

제가 일본 가면 항상 가게에 쓰여 있는 알바 구직 자료를 보는데요.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얼마면 그것의 1.2배. 그다음에 일본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교통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철표 한 장을 줍니다. 그다음에 4시간에 대해서는 식사 한 끼를 줍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하고 관계없이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을 그래도 많이 지킵니다. 가서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한 80% 받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마인드가 개들을 착취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줄 거 주고 받을 것 받겠다, 열심히 한다.

그 친구들은 알바를 하는 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면, 먹고살아야 되는데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우리보다. 부모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를 하면…… 알바 하나 하면 겨우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교통비랑 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면 자기 일을 하면서 알바하고 밤에 잠 덜 자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있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지만 그다음에 기회가 생겼을 때 확 뛰어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그 계기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자문위원 이주형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희가 오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얘기를 다 추렴해서 제가 의견을 들어봤지만 사실은 지금 정책은 난무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인용하겠지만 저수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실제 청장년이나 현장에는 내려오는 게 약합니다. 한 예로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0년이 앞선 기술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들한테 이런 뿌리 깊은 기술부터 가르쳐 줘야 청년미래가 행복한데 우리는 당장 뽕질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대만에서 배워 왔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량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을 뿐이고 실제 거기에 있는 팩트, 거기의 중요한 핵심 키텍사 같은 기술은 아직 우리가 미약합니다. 두루뭉실로 그냥 정서적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 세계가 창업교육, 발명·특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발명·특허 교육을 시키면 선생님이 잘리고 교수가 잘립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부터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수치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니는 과정에 정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김혜빈 이사님, 그렇지요?

○자문위원 김혜빈 예, 변화할 수 없다고 다들, 약간 더럽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치는 나쁘고 더럽고 치사하고 사기꾼들이나 하고 이런 것으로 대중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 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정치에 대한 이해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문위원 김혜빈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지금 정당을 찾아와서 정치 활동이나 배우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정당,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19세로 제한되어 있나요, 안혜영 소장님?

○자문위원 안혜영 18세로 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19세로 되어 있나요, 현재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신보라 위원 19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19세이지요?

지금 법적으로는 19세이고 피선거권은 25세로 제한되어 있지요?

안혜영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8세가 아니라 사실은 정당 가입이 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주니어들이 실제 정당 활동에 참여해서 얘기를 듣고

토론 과정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정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 안혜영 아까 제가 베트남 응에안성의 예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청년 당원이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 만 30세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만 30세부터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나 정치참여에 관련되어서 요구는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제반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참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나 자립성이,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무제한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은 일반적인 가치관 확립에 잘못된 선입관을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환경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반적인 것들과 함께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청년들이 정당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당보조금을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 왔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많은 당의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청년정치발전기금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최소한 5% 정도는 확보해야만 청년들이 당원으로 정당 활동을 할 때 정당 활동이 올바르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정당 활동이 사회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청년들에게 정치참여도 하고 정치참여에 필요한 예산도 다함께 청년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구조는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청년들이 정부나 아니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예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듣고, 예산을 5%든 10%든 정당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들이 가능할까요, 정치적으로,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자문위원 안혜영 사실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유치원생들이 국회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십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7세 유치원생들이 국회 견학을 할 때에 유치원에서 국회 견학을 그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합니다. 7살이 뭘 알겠나 싶지만 그 친구들이 정치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싸움터의 국회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같이 수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자유학년제를 비롯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개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이라든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회 활동들을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에서부터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고, 그 관심에서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국회 견학도 마찬가지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 견학하는 코스조차도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여쭙 본 이유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정치인의 이야기,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자기 얘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정책 당국의 고민

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김효선 자문위원께 질의를 드리 볼게요.

옛날에 젊은 피 수혈론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 때거든요. 2000년 총선 때인데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유력 정치인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당 내에 인재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정당에서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인데, 국회와 정당을 좀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국회와 정당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당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국회와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투자가 매우 빈곤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 김효선** 사실 아까도 자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육칠십 % 정도 보전을 받을 텐데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문위원 김효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 제도가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거든요. 강하게 주장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시다. 아마 참여연대에서도 비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뭔가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래도 최상위의 시스템으로 정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대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정당에서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차원에서는 거의 자원 봉사 수준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생계는 개별적으로 따로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당이 어떤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장의 장소로서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상당히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정당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허용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올려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원천적인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또 유력한 시민단체에서도 일을 하시니까……

○**자문위원 김효선** 일단 참여연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을 높이기 전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야 국고보조금을 올리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수익사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것은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의원마다 책자도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산이 사용될 것이며 내 정책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한다. 그래서 나는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다’ 이런 정책 서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나라의 경우는 한 1달러 정도로 해서 매번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때는 정당에서 내는 것도 있으나 이것을 책자로 파는 것은 거기 안에서 대개……

○**권철승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거의 재정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제작비 수준으로 될

겁니다.

○자문위원 김효선 예, 아무래도……

○권철승 위원 정당의 홍보 수단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물질적 지원의 수단으로서 아마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당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지역에서 당 활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실상의 정당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이 들어오면 표가 떨어지니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당 후원회가 작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금액도 상한이 50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과거에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깨끗한 손’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은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장했었던 분들 제가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엄청나게 후퇴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야 청년의 정치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주엽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위상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식, 이 현상 자체가 일종의 시장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주어진 칼이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칼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격려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방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주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주시고 그게 전향적으로, 이게 모든 게 얹혀 있으니까 결국에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의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위원 안주엽 다 좋은 말씀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것은 내 일 아니라고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의 법 취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다 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많이 나아졌지요. 다행스럽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의 실패로 보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고 불공정한 겁니다, 그냥. 시장 실패는 모든 게 다 합리적인데 여하한 이유에서건 하여튼 제대로 안 되어 갈 때 시장의 실패라고 했고 그 왜곡을 고치려면 거기에 딱 맞춰서 고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데는 아무리 정책을 써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불공정 자체를 없애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작년부터 좀 나아지는 기미는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의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실제화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근본적인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한 손가락에 밥 다 먹은 것 아니고요, 차근차근 가면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한 5년~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권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4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단이라고 표현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상

되거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 예산과 세제·금융 대책이라고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노골적으로 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난에 울부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인데 실제 정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근본방안이 무엇이나, 아마 이번에 발표될 대책도 그런 구조개혁의 측면은 등한시한 채 재정 투입의 측면으로만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가장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예컨대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창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재편이랄지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실은 보다 시급하지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산업 전반적인 조정의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빠져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노조랄지 기성세대들의 강한 입김으로 작용을 해서 우버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문제도 저는 세대 간에 일자리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충분히 큰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이윤정 자문위원님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긴 했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부분도 실은 일자리를 양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도를 했지만 청년세대로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많은지, 혹은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50세, 6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정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60대 이상 근로자의 단기고용만 늘렸더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 실사례를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셨던 거지요?

○자문위원 이윤정 화물 관련 채용역하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였고요. 그 업종은 회계에서 담당……

○신보라 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정유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면서 고용인원 자체가 줄어들어 실은 해고 대상자가 된 건가요?

○자문위원 이윤정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문위원 이윤정 빠져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당연히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까?

○자문위원 이윤정 저의 친구 사례는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넣었던 거였고요. 저의 주변 지인들의 사례는 정말 삶의 근간이 흔들렸더라는 그 표현으로 다 녹아져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들이 지금 체감이 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조금, 청년의 나이에서도 조금 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회에서도 사실 동일한 출발선에서는 시작되지 못해서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일자리 대책의 내용이 좀 많이, 기본적인 골격은 저는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과장님과 기재부에서는 사무관께서 배석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나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기획관님 오셨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기획과장, 제가 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될 대책에 규제개혁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입니다.

현재 대책에는 구조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못했고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특단의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계속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될 사안 중에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들도 아마 확대 방안이 저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이 다 작년에 추경이 편성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실제 집행률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예, 좀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대부분 부진했지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53%,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 45%,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60%,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5.8%, 특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 특단의 대책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35%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한 확대방안이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일부 좀 조정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주엽 위원님이랑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의 질 문제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청년을 취업을 시킨, 고용을 한 중소기업에게 돈을 주겠다 장려를 한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에 고용률을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직률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사용자에게 이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말 필요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장 김부희** 과거의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과를 봐도 예전보다는 고용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인데 과연 확대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청년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것을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한다면 더더욱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보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산 단원을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이자 또 이슈라면 청년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나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혜영 청년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해 주신 데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고민을 공감하고 계시지요?

○**자문위원 안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큰 이슈이자 결혼과 저출산과 연결이 되고 청년 일자리가 안착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갈등하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공통된 고민이지 않습니까?

발제문을 보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청년들이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또 소득과 소비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줄 수가 있고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혜영 연구소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안혜영**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전국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청년

들이 질이 높은, 질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주거 문제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내 집 주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미래에 청년이 될 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에 관련된 초점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또 근처에 주거라든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현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고 연결하셨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우리나라에 전부 단위별로, 국회의원 단위별로 하면 약 한 256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군구마다 특화가 다 다릅니다. 농어촌 지역 또 복합 지역, 도시농촌 복합 지역, 또 어촌 지역,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 중에서도 또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시가 있고요 또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도권 중에서도 공단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지역이라고 본다면 국가 산단공이 있거나 또 산업 스마트 허브가 있는 곳인데, 구로공단이 라든가 반월·시화공단이라든가 스마트 허브라든가 구미공단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인데 그러면 그 주변의 SOC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의 주거, 복지, 문화, 또 그러고 나서 결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려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느냐? 거기에는 일단 청년들의 눈높이, 일자리의 질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제조업체이고 또 청년들이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이나 혹은 IT 쪽을 원하는데 현재

도시마다 있는 일자리는 거의 과거 전통식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15만 정도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일자리를 메우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 그리고 외국인 여러 가지 인력에서 충당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좀 더 새로운 IT 쪽이라든가 혹은 B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청년들이 대학교 때부터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훈련을 통하고 또 그 보육·창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끊임없이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청년들의 인큐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창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서로 운영할 때 일자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일자리가 안정되고 청년들에게 눈높이가 맞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세금 감면만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혜영 정책연구소장님께서도 다음 여러 가지 연구 발제하실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자문위원 안혜영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안산이 지역이시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전국의 지방의 애로점은 사실 경기도에서만 본다고 하면 북부에 대한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청년들을 수년 만나면서 현장에서 목소리는 기성세대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아주 국한되어 있다, 저희들이 매번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성세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현장만의 목소리로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일자리에서는 4차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당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지금 민주연구원과 함께, 민주연구원은 당의 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실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함께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말하는 문제점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의 목소리 전달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논의를 더 하겠고요.

청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만났었는데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후원이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청년들이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이 문제는 정파를 초월해서, 이것은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진영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큰 어젠다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 그리고 지금 지도자, 청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안혜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윤정 위원장님께는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해서.

○위원장 이명수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鄭仁和 위원 민주평화당의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오늘 자문위원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도 말씀을 거의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청년문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 취업 문제 하나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국회의원들 또한 다 정확히 동의를 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또 건강 또 정책 참여, 정치참여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취업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횡적으로 또는 종적으로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주엽 연구위원님께 구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묻기만 하겠습니다.

대개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한 후에 이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형적인 게 저는 일본 취업 행태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 10년 전하고는 달리 거의 100%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후에 이직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정부에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 연구위원님께서도 밝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단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역시 취업한 후에 이직을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률이 아까 9.8%라고 그러셨잖아요. 9.9%에서 조금 내려왔고 이게 체감실업률을 따지면 사실은 24%까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포함하거나 니트족까지 포함하면 40%가 넘는다는 민간 연구소의 통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결국은 대졸자들 그다음에 4년제·2년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취업 자리가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4년제 대졸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2년제 대학이나 고졸자들이 갈 수 있는 취업 자리로 가지 않고 취업재수생으로 남다가 그냥 쉬기도 하고 또는 니트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문제 그다음에 4년제·2년제 대졸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임금 문제

도 있지만 또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 취업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문제에 정부가 취업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겠지만 그러한 정책도 단기 위주 또 예를 들면 임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이런 식에 집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 문제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또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 안주엽 옳은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요.

결국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케인즈가 얘기한 것인데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우리가 장기를 얘기할 때는 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게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구조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자면 아까 제가 공정거래 얘기할 때 10년 정도 뒤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얘기했지만 지금 말한 것들은 좀 더 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특히 우리 세대의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게 더 젊은 세대들한테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바꾸자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두 세대 지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러면 청년들은 다 죽어 버립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도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단기에서는 가장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증요법적인 임시방편의 지원 이것 갖고는 지난 20년의 역사가 보여 주었듯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정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왜곡을 조금 없애고 그다음에 투자의 개념에 가깝게 해서 25살짜리 청년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70세, 80세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한테 세금으로 돌려주는 그 돈이 그것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판단할 때 5년 이내에 이 돈 쓴 효과가 나타날까 이러거든요. 그러

면 안 되는 거지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지원을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이 좋나 안 좋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것은 너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鄭仁和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수 예, 하시지요.

○鄭仁和 위원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우수한 청년들은 다 죽는다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대책뿐만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보는 구조적인 대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문위원 안주엽 예, 맞습니다.

○鄭仁和 위원 김효선 간사님께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청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의 당사자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확히 제 견해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또 국무총리 산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청년들이 할당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견해에 동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들이 대부분 어떤 입안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젊은 피 수혈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권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 내에 인재를 기르지 못하고 외부에서 인재를 구해다 쓰는 이것은 결국은 정당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기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하고 그 충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정당 활동·정치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영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가 해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의 어떤 상황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정당에서 또는 정치에서 수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위원 김호선 일단 입안 단계에서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위원회 참여는 어떻게 보면 심의·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예 입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의 당사자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토론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에서 청년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적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부터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위원회가 45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고,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도 대학생이 아닌 경우가 되게 허다하고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 조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당사자성이 거기 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제안서도 당내에서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안서가 사실 작성은 쉽지만 이게 또 어디서 그것을 받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성의 논란이 예산이 없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풀을 갖추기 위해서 양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 모집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모집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치학교라고 하지만 이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많고, 거기에 학습료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참가비도 몇십만 원에 이르는 곳도 많고요.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너무 일회성이고,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청년위원회가 45세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예 들어가기 어려운, 들어가서도 그냥 일만 하게 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로서만 그치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仁和 위원 예, 고맙고요.

일단 청년·대학생위원회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과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정 위원 의사진행말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박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질의하고 다 듣고 하는 건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그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은 사실 뒤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진행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시간 예측이 잘 안 되어서 계속 늦어지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행 좀 그렇게……

○위원장 이명수 사전에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안 오고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점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박사님, 아까 좋은 의견도 내 주시고…… 단편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콜럼버스 달걀처럼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인에 대한, 직업군인이나 이런 말씀들은 저희가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20년 전부터 피터 드러커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정책이 전부 다 과거 중심으로 해서 ‘과거는 이랬으니 이것을 극복해 보자’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청년실업 문제 또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의 추세, 이런 것들을 인구 기본으로 해서, 센서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한번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임금 차이가 65% 정도에서 지금 얼마큼 됐어요? 한 52% 정도로까지 떨어졌나요? 54%?

○자문위원 안주엽 그냥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 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관계가 또한 50% 정도 되지요?

○자문위원 안주엽 예, 그것도 반 정도……

○박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일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하고 보면 비정규직이 한 31% 밖에 안 되지요?

○자문위원 안주엽 여하한 계산 방법에 따라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박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5년을 보니까 무려 10%나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64%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자문위원 안주엽 잠깐만, 그 부분은 잠깐만 천천히…… 숫자를 제가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박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한 64% 정도 되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는 비율을 보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64%가 됐으니, 또 2007년부터 시작해서 10%나 늘었으니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로 비정규직화로 가면서 일자리 문제도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얼마큼 정도를 봉급으로 받으면 계속 중소기업에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80%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정부에서 지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내되 근무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해서 기간을 결혼 주기까지 해서, 취직과 결혼, 자녀 낳는 것까지 해서 죽 5년 또는 7년을 늘렸을 때 한 1억 정도 채워지면 그게 한 80%나 85%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러면 내가 굳이 대기업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보상체계가 나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극소수에 대해 제한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윤정 위원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위원 안주엽 죄송한데,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박정 위원 아닙니다.

○자문위원 안주엽 약간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박정 위원 조금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정규직화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극소수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공공 일자리 확대라는 게 자꾸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하는 거지요. 공공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기업에서도 충분히 마중물로 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도 안정자금을 5조 원 지급하지만 또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여야가 합의해서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 5년간 9.6조 원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이 5만 원씩 늘어서 5년간 29.5조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거의 39조에다가 아까 5조 원까지 하면 44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은 5년으로 나눠 보면 한 8조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 돈 드려서 또는 아동수당 돈을 줘서 멀리 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지역 화폐로 바꾸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살고, 그래야지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야지 청년들도 취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정치에 대한 청년 참여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중국의 공청단이 14~28세까지가 한 9000만 명 됩니다. 공산당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4~28세까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일 계속 하면서 본인들이 꾸준히 당비를 내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물론 15년도에서 16년도로 갈 때 공청단 예산이 반으로 깎인 건 있습니다. 그래도 540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청년비율할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정치인을 기르는 게 아니고, 당에서 할 일들이지요. 당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거기서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 냈으로써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됐느냐? 청년이라고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학자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 갖고 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안주엽 박사님 하실 말씀 하시고, 이윤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안주엽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문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시는 입장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 건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팩트 자체가 약간 왜곡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왜곡된 상태에서 솔루션을 찾으려면 그것은 여전히 왜곡된 결과를 나타내고 안 한 것만 못한, 우리가 말할 때 정책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이 약간 점프되는 게 많아 가고요. 가령 숫자로 치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아까 처음에 저한테 단답형 질문하신 거랑 연결되는데 비정규직 64%라는 얘기는 일부 견해, 일부라는 게 100%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부입니다. 저는 64%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에 쓰는 게 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 정책을 하시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에만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 왔고요, 격차도 조금 줄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격차가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격차가 없으면 너 비정규직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비정규직 안 하거든요.

격차는 존재합니다. 격차도 존재하고 차별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격차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격차를 차별이라고 한다면 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게 정책 방향이고요.

제도적으로도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비정규직으로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못 가게 만드는, 예를 들면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법에서 잘못된 게 많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되어 가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점점 나아질 거고요.

그래서 의도는 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숫자나 논리의 점프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은 기울어진……

○박정 위원 그래서 여쭙봤던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로 말씀드렸고, 큰 틀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정책이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자문위원 안주엽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 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니 이것 자체가 같이, 청년실업률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지요.

○자문위원 이윤정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자문위원 자리 요청 왔을 때 청년 일자리, 청년정책 그리고 청년 정치참여, 이 세 가지 기조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서 고르게 발제 준비해서 왔는데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질의응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방향성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계상에서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의 부분들, 현장에서의 작은 부작용의 목소리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수당 5조, 노인기금 39조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청년 일자리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있는 정책이 온전히 잘 운영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도 좋은 것과 비효율적인 것들이 구분되어 있겠지만 있는 것 먼저 온전히 100% 이상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고민과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 청년 일자리가 전체적인 경제 흐름하고 무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 한정된 분야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잘되어야 청년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문위원 이윤정 예,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를 가리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회의 현상이나 실태에 대해서 견해의 다양성은 인정하고 다만 팩트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웃음소리)

이주형 자문위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유사 지원 사업 중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하고요, 또 청년문제라고 해서 청년 당사자만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의 장점을 활용해서 조화적인 해법을 강조하신 발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팀 스포츠를 생각하면 노장들과 신인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강한 결과를 낼 수 있고, 정치도 또한 노련한 선배님들과 청년의 참신함이 잘 있어야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나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깊이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와 장년 은퇴자의 협업자금 지원 방안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은퇴자의

재창업에 대해서 혹시 청년들이, 착취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과할 수 있는데요 혹시 손해를 보거나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우려도 존재할 가능성은 조금 염두에 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제시한 대로 2017년에는 1400억이고 2018년에는 1300억으로 100억 원이 삭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파이를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청장년이 융합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선도적으로 시행해보는 단계를 거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청년 몫은 청년 몫대로 두고 또 융합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나 판단이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이주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정부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일단은 청장년 시범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리고 아까 제 발표 중에서 한 가지, 지금 현재 계약학과 문제를 제가 거론드렸는데, 전국에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학과가 직장을 3년 이상 다녀야 입학할 자격이 있어요. 그전에는 사장님들도 입학이 됐었는데 이것을 언젠가 노동부에서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학과의 장점, 사장님도 능력은 있어서 사업에 성공했지만 학력이 없어서 계약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을 단절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학함으로써 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면 그분이 계약학과를 다님으로써 해서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리드합니다. 같이 합니다, 공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이제 없애 버리고 행정적으로만 하니까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했듯이 지금 다른 나라, 우리보다 따라오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이디어 교육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계약학과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여기에다가 아이디어창업과를 만들어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자……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요. NCS 교육

에 연관된 것만 자금을 지원하지 새로운 이런 것은 자금 지원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정부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 조사해 보면 직업훈련이 1조 708억, 고용장려금이 6115억 원, 창업 지원 5685억 원, 고용서비스 4302억 원, 직접 일자리 3315억 원, 이게 뭐가 분류가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저는 이 분야에 처음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피부로 닿는 조련사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장의 소리답게 학교에서 교수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이 부서가 청년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에, 정말 정책적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같이 연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약학과도 만들어 놓고 바로 바뀌고 바뀌고 하니깐 실제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죽,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행복해야 우리나라가 행복합니다. 물론 정치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민생고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 이렇게 성과를 보면 사실 능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입은 바쁜데. 그런 분들을 우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련하자는 표현을 제가 발표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석하신 정부 부처에서도 청장년 융합 지원 사업 등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언론매체였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당위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위원회도 보고 청년위원회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과 청년들한테 사실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헌신 이것만 있지, 사실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철승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와 뜨거운 열정, 헌신, 열정페이 이런 것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능을 가져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20대 국회의 평균 스펙을 보게 되니까 학력은 대학원 졸업 이상, 재산은 41억 이상, 평균 연령은 55.5세, 성별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국 국회는 아직 좋은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대의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20대 총선에서 만 40세 이하로 당선된 사람은 김해영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점점 평균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데요.

먼저 이윤정 토론인 자문위원회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년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부분은 저는 재정 형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예비후보 과정에서 본선에 이를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당선이 된다 그래도 직업 정치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윤정 자문위원회께서는 공당의 대학생 위원장이자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받는 제약이라든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문위원 이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경제적 인 문제가 청년 정치참여의 저해요소 중의 하나

인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경제적인 부분, 선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도 한 5000여만 원의 그런 자금이 사용되는, 선관위에 명시되어 있는 돈만 그 정도가 들고 또 다방면으로 책정되지 않은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내하고서 출마를 도전하고 그리고 선거를 뛰어서 당선될 수 있는 선출직 의원이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에서도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조직 관리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여러 가지 소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일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년간의 임기가 쌓이다 보면 50~60대 경제력이 좀 견고하신 타 의원님들에 비해서 청년 정치인들은 뿌리가 좀 더 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의원들이 재선, 삼선 의원으로까지 연계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되는 선출직 의원은 청년 정치인인 게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소하려면 다각도로 또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정당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타 정당도 이러한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력으로는나 조직적으로나 여러 경험적으로 상호보완을 받아 가면서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정치할 수 없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 정치할 수 없는 그런 현상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끌어 내는 것 사실은 정치인의 몫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에 대해서 사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것인데요. 그 지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의 길을 막아 버리는, 그래서 악순

환이 계속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그거 바로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금 젊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도 노력해 줘야겠지만 우리 자문위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요구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도 많이 크지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지 않았을 때 우리 청년 정치의 미래는 개선되지 않는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찬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아주 결론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꼭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가 오찬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지금은 오늘 1차 토론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 관련 각계각층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여러 자문위원님들 정말 귀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 또 여러 위원님들 논의드린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청년 관련 법규나 또 정책 선택에 관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에 애쓰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또 의원실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3월 22일 오전 10시에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권칠승	김종훈	김해영	박순자
박정	박찬대	신보라	위성곤
이명수	임종성	정유섭	정인화

○청가 위원(1인)

채이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홍성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윤남이

○출석 자문위원

김가람(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혜빈(싱크탱크 미래이사)
 김효선(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
 이윤정(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주형(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 교수)